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20대 국회 의정활동과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강 경 석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20대 국회 의정활동과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권 일 응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강 경 석

강경석의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이들의 정책 성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중 정책 성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약 개수가 많고, 이행률이 높을수록 공천과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후보자 요인과 정당 요인 등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책 성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당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정당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의정활동 성과가 공약 개수와 이행률만으로 산출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책학적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 유권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정책이 입안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이뤄낸 정책

성과를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 지표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 모델을 수립해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향후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 정책공약, 입법공약, 공천, 당선

학 번 : 2020-20829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1. 연구의 대상	6
2. 연구의 범위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9
제 1 절 이론적 논의	9
1. 합리적 선택 이론	10
2. 회고적 투표	11
3. 전망적 투표	12
4. 당론 투표와 정당 일체감	13
5. 합리적 무지 이론	15
제 2 절 현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6
1. 현역 효과의 의의	16
2. 기존 연구	17
제 3 절 선거공약과 공천, 당선에 대한 선행연구	19
1. 공약이행과 공천, 당선의 의의	19
2. 공약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	21
3. 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22
4. 당선에 대한 기존 연구	24
제 3 장 연구 설계	26
제 1 절 연구 가설의 정립	26

1. 연구의 전제	26
2. 연구 가설	26
제 2 절 변수 설명	29
1. 종속변수	29
2. 독립변수	29
3. 통제변수	30
제 3 절 분석 모형	34
제 4 절 분석 방법	41
제 4 장 분석 결과	43
제 1 절 기술 통계	43
1. 독립표본 t-검정 분석	43
2. 일원배치 분산분석	49
3. 상관분석	52
제 2 절 모형 분석 결과	54
1. 연구모형 1에 대한 검정 결과	54
2. 연구모형 2에 대한 검정 결과	67
제 3 절 의정활동 과정 분석	81
1. 의정활동의 범위	81
2. 의정활동의 지향점	82
3. 의정활동의 영향	84
제 5 장 결론	8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6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87
1. 연구의 의의	87
2.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4

표 목 차

<표1> 종속변수의 빈도분석	29
<표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30
<표3> 연속형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31
<표4> 범주형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32
<표5>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36
<표6>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39
<표7> 집권정당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4
<표8> 상임위원장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5
<표9> 수도권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5
<표10> 영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6
<표11> 호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7
<표12> 충청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8
<표13> 학력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50
<표14> 선수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51
<표15>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52
<표16>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4
<표16-1> 이행률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6
<표16-2> 개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7
<표16-3> 통제변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표16-4>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표16-5>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1
<표16-6>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2
<표16-7>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3
<표16-8> 극단값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4
<표17> 공천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66
<표18>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7
<표18-1> 이행률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9
<표18-2> 개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0
<표18-3> 통제변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1
<표18-4> 낙천자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2
<표18-5> 수도권 지역에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3
<표18-6>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5
<표18-7>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6
<표18-8>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7
<표18-9> 극단값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8
<표19> 당선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79

그림 목 차

<그림1> 연구 모형 1	35
<그림2> 연구 모형 2	3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정치는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부의 정책 실행, 그리고 해당 정책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부의 법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모두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각종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서 수립돼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료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두 축이 국가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국가가 임용하는 관료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 임기를 부여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자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해 심사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¹⁾

국회의원은 법률과 예산에 대한 심사, 의결 등을 통한 정치 활동으로 국민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교육, 납세, 근로, 국방, 환경 보전의 의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정하는 각종 법률안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을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선거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유권자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 2항

들의 투표를 통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졌다. 21대 총선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²⁾을 기록하면서 입법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에 대해 그들의 성과를 토대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제대로 견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정책 과정에 관료직 공무원만 관여돼 있다면 위와 같은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직접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토대로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추천(공천)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아 정당 후보자로 입후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정책에 기반을 두고 후보자를 평가해 공천하는 사례보다 후보자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공천 과정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다보니 본 선거에서도 급조된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심지어 다른 후보자의 정책을 베낀 공약까지 등장한다.

국회의원들은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인기와 인지도를 기반으로 낙하산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걸러내려면 국회의원의 공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화되고,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입법기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로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공약의 정책 반영 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게다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부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법공약은 거의 없고, 선물보따리 풀 어놓듯 제시되는 지역개발공약이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오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개혁입법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위원회활동을 희망하는지를 제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선거를 치른다.

Schattschneider(1935)는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 (new policies create a new politics)” 고 했다. 정책과 정치가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고, 정책이 정치를, 반대로 정치가 정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부터 실제 실행을 가능케 하는 데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입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4년 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국회의원들의 성과, 구체적으로 정책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해당 성과가 국회의원들의 당선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입법부,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자면 전체 의원 300명 중 253명에 이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성과는 4년 마다 내놓은 선거공약의 이행 여부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4399만 명 중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토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나아가 국가적 대변혁의 출발점인 대통령 선거마저 공약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념과 진영 논리가 우선시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약은 선택 기준 후 순위로 밀려버리는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과 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공약의 목표와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명기한 선거공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하지만 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선심성 공약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내용의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하고 이를 회신 받는 방법을 통해 4년 마다 공약이행도를 분석해왔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공약이행 결과는 완료율이 46.80%에 그친 수준이었다. 19대 국회 공약이행 완료율 51.24%보다 4.4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⁴⁾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의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생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한 성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견제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책을 고안하고 법안을 입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대부분 소속 정당의 정책, 또는 지역구 이해관계, 심지어는 해당

3) 공직선거법 제66조 2항

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의원실의 정책 담당 보좌관들의 조언에 따라 공약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상 깜깜이 선거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인지도와 배경, 그리고 스토리에만 집중해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게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2021년 5월, A정당 기획조정국 소속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추천 담당 업무 수행자 인터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정말 임기동안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있을까? 아니면 의원들의 공약은 당선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급조한 비현실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단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당선 이후에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 만일 공약 이행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큰 편차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조사한 제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기초로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개수, 공약이행 완료율(공약 이행률)을 검토하고, 이들 가운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재직했던 이들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공약 이행 여부 외에 다른 요소가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을 평가를 위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 국회의원

본 연구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을 대표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점을 고려했다(김민경, 2014).

2) 정책공약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제시한 공약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시행한 국가 예산 심의 등을 포괄해 정책공약으로 지칭하고, 크게 입법관련 공약과 재정관련 공약으로 분류한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자체 공약이행 평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한다.⁵⁾

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

2. 연구의 범위

1) 국회의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조사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당시 공석이었던 5명, 국무총리 및 장관직 수행 중이었던 4명, 불출마 선언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27명 등 36명을 제외한 217명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분류한 조사 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집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각 의원실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의원실에서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1차로 수령한 뒤 검증을 통해 2차 보완을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 비취볼 때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임의로 집계한 자료 대신 연구 대상에 대해 동일한 자료로 분석한다.

2) 정책공약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집계한 총 공약수는 7,616개로 이를 크게 국정, 지역공약과 입법, 재정공약 등 2개 분야에서 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정, 지역공약 모두 각각 분류해서 이행여부를 집계하지 않았고, 재정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공약 관련 재정 확보 총액을 명시했을 뿐 이행 여부에 대해선 구분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입법공약만 별도로 집계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는지 검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원별 전체 공약 개수, 입법공약 개수에 대한 이행을 분리해 분석한다. 정책공약은 전체 공약을 총 포함하는 개념이며, 입법공약은 정책공약의 하위 집단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를 분리한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 국회의원의 성과로 국회 입법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공약이행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년 마다 공석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발송해 공약이행 현황을 조사한다. 1차로 공문과 함께 유선전화로 회신 요청 후 약 한 달 동안 수집한다.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소명 요청을 요구하고 최종 평가 이후 결과를 발표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공약이행률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경우 공약 완료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거공보물에 제시돼 있는 공약 중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했다.⁶⁾

사업 성격에 따라 완료 기준이 다르다. 조성, 건설사업은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를, 시설유치 사업은 입법 및 행정결정 등이 완료돼야 기준을 충족한다. 자본유치 사업은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됐을 경우, 건립공약 사업은 완공됐을 경우에 한하고 착공시 정상추진으로 분류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가 시작됐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는 입법 공약의 경우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4단계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이행도를 적용해 본회의 의결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공약이행률 = 완료공약수 / 총 공약수 × 100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이론을 크게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제도적 측면 등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 관점에서 후보자에게 어떻게 투표하는지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합리적 투표 행위 이론(Riker and Ordeshook, 1968)에 근거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유권자들이 투표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유권자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 등 유권자의 내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선거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 유권자의 외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즉, 합리적 투표 행위 이론은 궁극적으로 유권자 개인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가 투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합리적 투표 행위 이론은 기대효용을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Downs, 1957)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는 투표로 인해 유권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투표한 후보자가 실천할 정책 혜택이 투표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한다는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해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에 비추 본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유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후보자일수록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둘째, 후보자의 성별과 학력, 경력, 현직 여부 등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후보자 요인(김석우,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자의 특성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의는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뤄진 바 있다.

셋째, 법과 제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기반을 둔 정치적 충원 이론이다. 후보자 공천과 같은 정당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 이론을 포함해 유권자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규범, 구조 등이 중요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김석우, 2004).

본 연구는 후보자 요인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하고 정책공약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 유권자가 속한 지역의 사회학적 특성, 제도적 요인과 연관된 요인을 포괄해 통제변수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약이행률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관통하는 대표적 이론인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롯해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한 다른 기존 이론들과 비교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1. 합리적 선택 이론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내리는 결정과 관련해 그 과정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행위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순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이해득실에 따라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강원택, 2000). 국내 정치학에서 논의돼 온 합리적 선택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비중 있게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여야로 대표되는 양당체제가 자리 잡은 상

황을 전제로 발전돼왔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비춰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약이행률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 더 나아가 합리적 투표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권자 개인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전체 유권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다수의 합리성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의 결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달리 선거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결정의 총합이 집단의 합리적 결정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공약이행률에 기반한 투표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회고적 투표

집권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 등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는 Key(1966)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이어진 연구에서는 회고적 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집권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수록 투표에서 여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우리나라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같은 해 치러지지 않았던 경우에 한해 이를 비교 분석하는 다수 연구가 수행돼 왔다(가상준, 2008; 배은진 엄기홍, 2016). 미국과 같이 중간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집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가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회고적 투표에 비취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약이행률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선 최소 2개 이상의 전국 단위 선거를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각각 연구 분석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 이론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약이행률을 회고적 투표를 토대로 분석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설문조사 등을 참고해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2차례 이상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토대로 분석해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상황에서 펼쳐진 전무후무한 선거라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회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박선경, 2020). 이에 비취볼 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약이행률의 경우 회고적 투표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전망적 투표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 행위는 앞서 살펴본 합리적 선택에 근거해 유권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Downs, 1957). 이를 위해선 유권자가 자신의 효용과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는 이와 같이 후보들의 개별적인 정책공약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고 있다. 또한 넓게는 ‘좌파, 우파’ 또는 ‘진보, 보수’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돼 있는 양당

체제에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이해관계와 가까운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국내 정치학에선 전망적 투표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거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꼽고 있다(윤종빈, 2008).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이 유권자에 대해 회고적 투표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투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대통령 당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이내영 안중기, 2013).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와 같은 아젠다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의 경우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전망적 투표에 대한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달리 253명에 이르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인 전망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양당체제를 전제로 내린 전망적 평가에 기반하는 투표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공약이행률의 경우 전망적 투표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당론 투표와 정당 일체감

유권자보다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론 투표

(Party-line voting)의 경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 분석해볼 수 있다.

임기 중 특정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행위를 자율적 투표, 또는 당론 투표로 구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당선되려는 동기를 가진 의원일수록 유의미하게 당론 투표에 임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서정규 이현우, 2017). 연구 대상이 19대 국회에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재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현역 의원이 정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당론 투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의정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책공약과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 여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 해당되는 당론 투표와는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도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장승진, 2015). 소속 정당만 보고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하는 맹목적인 투표 행태가 과거에 비해 다소 사라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몰표를 받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정당 일체감의 경우 앞서 살펴본 회고적, 전망적 투표 행위와 연결돼 나타난다는 점도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기도 했다(길정아 강원택, 2020).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현직 정부의 성과와 차기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 등 회고적, 전망적 투표를 넘어서 당파적 선호도가 투표 과정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본 연구 대상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일체감, 더 나아가 당파적 편향성이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 정책공약에 우선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합리적 무지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과 더불어 경제학에서 파생된 합리적 무지 이론(Rational ignorance theory)은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저조한 투표율 등을 설명하는 정치학 연구에서 자주 거론돼왔다.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해당 정보를 습득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정책 등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정책공약, 그리고 공약이행률과 관련해 합리적 무지 이론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공약이행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가 실제 선거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이행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시를 넘어서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유권자 또한 ‘합리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합리적 무시가 유권자들에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책공약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토대로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현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 현역 효과의 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현역 효과를 꼽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최대한 통제하고 정책공약 이행 여부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 재선 효과라고도 불리는 현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 과정에서 현역 효과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다.

현역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비단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유권자와의 친밀도, 지명도 등의 이점에 의해 현역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선률이 매우 높다(한정택, 2007). 주지사 등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기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현역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경우 선거 경쟁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다. 미국의 경우 현직 의원의 재당선율은 90%를 상회한다(박명호 김민선, 2008)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현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대상을 토대로 오랜 기간 이뤄져왔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원과 정보를 토대로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현역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정치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고전적 연구(Mayhew, 1974)부터 현역 의원에 도전하려는 후보자의 개인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까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현역 효과는 입증돼왔다.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도 다수 있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서 후보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지역과 정당 변수를 통제한 뒤 현역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

동을 했던 의원일수록 득표증가율이 높아져, 이른바 현역 효과가 실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종빈, 2010). 이런 경향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보다는 초·재선 의원에게서, 또한 낙선한 현직 의원보다는 당선된 현직 의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가 다음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기 때문에 현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정책 성과 외에 현직 효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

2. 기존 연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현직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당과 지역을 구분해 득표율이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왔다.

문용직(1997)은 독립 변수로 집권 여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도시와 농촌, 원외위원장 출신 여부로 14대 총선과 15대 총선의 평균 득표율 차이를 통해 현직 효과를 입증했다. 후보자의 연령과 당적 변경 여부를 독립 변수로 설정해 13~16대 총선에서의 후보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이갑윤 이현우, 2000)도 있었다.

현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초선 여부, 현직 의원의 의정 평가, 지역 정당 여부 등이 득표율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윤종빈(2002)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과 영호남 지역구도가 현직 의원의 득표율 증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한정택(2007)은 소속 정당의 크기와 집권 세력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야 정당 여부, 이전 선거의 당선 경합도, 국회의원 선

수, 법률안 발의 건수, 미디어 출현 빈도, 당적 변경 여부 등이 현직 의원의 당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14~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법률안 발의 건수는 현직 의원의 당락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가 거듭될수록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후보자 관련 요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현직 의원의 득표율 증감과 당락 여부에 정치자금 모금 능력,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 지역 정당 후보 여부, 특정 정당 소속 여부, 이전 선거에서 2위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와 함께 의정활동 평가가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한 연구(윤종빈, 2007)도 있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 역시 대부분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선거 당시 시대적 상황과 대외 환경 요인이 미친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진행된 유일무이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 3 절 선거공약과 공천, 당선에 대한 선행연구

1. 공약이행과 공천, 당선의 의의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정책, 예산, 이념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이행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간주돼야 한다. 하지만 고전적 연구에서는 공약이행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득표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든다”고 주장한다(Downs 1957, 54).

이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Downs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승자독식제라는 구조 때문에 여야 정당이 오로지 승리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맞붙는 대통령 선거는 차치하더라도 전국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해 자신을 당선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당선을 위해 실현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책공약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역 의원들은 임기 중 이뤄낸 공약이행 내용을 의정활동보고서와 선거공보물 등 각종 수단을 통해 홍보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하고자 한다. 또한 초선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기존 국회의원이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부각시켜 지적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약 이행이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부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등을 통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은 책임정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

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선거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목표를 제시해 득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현출, 2005).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 지역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구 범위로 설정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선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역시 극단적인 여대야소 지형으로 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연구 결과(박선경, 2020)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선보다 공천이 우선시 되는 지역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정당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주의 정치 풍토가 아직까지 영남, 호남을 중심으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당선뿐만 아니라 공천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주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컷오프(cut-off) 당하면서 선거에 나설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정치 신인이 전략 공천을 통해 현역 의원을 제치고 지역구 선거에 나설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한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방식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역대 선거 때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공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

도 다수 존재했다. 다만 공천 과정에 사용된 자료와 수치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식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유권자의 정책수요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이 공천, 당선 등 실제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면 유권자의 정책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약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

정수현(2017)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기초로 국회의원의 개인적 역량과 지역구 특성이 공약이행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또, 2017년 당시 여야 양대 정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공약에 모두 포함됐을 경우 개별 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이 높았던 점을 회귀분석을 통해 증명했다. 반면 양대 정당 중 한 정당의 공약에만 포함됐을 경우 공약이행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윤(2015)은 선출직 공무원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사례를 중심으로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기초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직 여부, 집권 정당, 선거 비용 등을 꼽았다. 반면 의정활동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를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연구한 정희옥(2012)은 유권자 중 절반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 이후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됐고, 정당과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 모두 정책 공약을 중요시하고 있어 추가 연구를 통해 변화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민전(2008)은 정당 충성도와 이념성이 재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보수·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이념성 등 정치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유권자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 바 있다. 박창규(201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하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 지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이행도를 바탕으로 호남 영남 등 패권정당지역과 나머지 비패권정당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한 뒤 재당선 여부를 수치화 해 각각의 이행률과 당선율을 단순 비교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패권지역에서 공약 실행 정도가 낮은 경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아니라 단순 수치 비교에 그쳤던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3. 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우선 공천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엇갈려있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거치는 것이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게 국내에 축적된 다수의 연구 경험이다(김한나 박원호, 2016).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거쳤는지는 당선이나 낙선 등 선거당락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누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어떤 정치활동을 해왔는지에 따라 투표할 뿐 정당의 공천 과정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박명호 차홍석, 2014)에서는 공천유형과 지역주의, 투표율, 후보자 수, 현직 여부 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해 경선을 통한 공천이 후보자의 득표율과 당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의 공천 방식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에 따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이유도 그동안 정당이 채택해온 하향식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공직후보 선정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현행법⁷⁾으로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을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공천 문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전용주, 2010). 이와 같이 공천을 둘러싼 폐쇄적인 정치 환경은 공천의 제도적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동시에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시도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천 관련 공개된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 공천 방식을 ‘민주화’ 했다는 연구도 공존한다(최준영, 2012).

7) 공직선거법 제47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비강제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당선에 대한 기존 연구

황아란(2002)은 선거에서 당선자와 후보자의 득표율과 비교해 후보의 당선경쟁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측정할 후 있는 당선경쟁력 지수를 산출했다. 다만 성별 기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 여성 후보라고해서 반드시 남성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실제 당선여부와 당선경쟁력 간에 차이가 존재했고, 당선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정당의 공천 여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안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춰 당선경쟁력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 결과 공약 유무와 당선경쟁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이창한, 2012). 다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내건 치안 관련 공약의 빈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진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앞서 공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정당별 공천 방식을 분류한 뒤 공천 유형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경선을 거친 집단이 경선을 거치지 않은 집단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입법활동력으로 지표화 한 뒤 선거 경쟁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하거나 1인 발의한 법안 중에서 통과된 법안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20대 총선 당시 기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범주로 구분해 입법활동력을 추산했다. 이를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해 입법활동력이 좋은 집단일수록 당선자가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김한나 박원호, 2016).

다만 기존 선행연구 대다수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선거 결과가 아닌 한 차례의 선거 결과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약이행 등 후보자의 정책 성과와 선거 결과

의 관계를 규명하기보다 주로 정당 공천제, 후보자의 요인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다루는 연구가 다수였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의 정립

1. 연구의 전제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재당선이다(Mayhew 1974). 개인적인 목적이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든 선거에서 승리해야 이를 수 있게 된다. 정당의 존재 목적 또한 선거에 승리하는 데 있다.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이념을 토대로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재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선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당선을 위해 국가적, 지역적 공약을 수립해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 연구 가설

국회의원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후보자, 정치 환경, 의정 활동 성과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후보자 요인의 경우 나이나 학력, 출신 지역 등 개인적 특성과 관련돼 있다(문용직 1997; 한정택 2007). 정치 환경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 당선 횟수, 관례적으로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정당 내, 그리고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임명되는 상임위원장 역임 여부, 해당 국회의원의 활동 지역구 등의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 요인에 해당되는 공약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워 영향력의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높은 의정 활동 성과를 거둘수록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의정 활동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책공약을 몇 개나 만들었고 이행했는지, 법안 발의가 필요한 입법공약을 몇 개나 제시했고 실제로 의정 활동을 통해 본회의에서 몇 개나 통과시켰는지⁸⁾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20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목표와 결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과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나설 수 있거나 정당의 공천 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인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 현역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개수가 많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1-2 : 현역 국회의원의 입법공약 개수가 많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1-3 : 현역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률이 높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1-4 : 현역 국회의원의 입법공약 이행률이 높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8) 입법공약 이행률 = 본회의에서 통과된 입법완료 공약수 / 총 입법공약수 × 100

가설 2: 20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목표와 결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과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당선 되는 데 정(+)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인 당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 현역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개수가 많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2-2 : 현역 국회의원의 입법공약 개수가 많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 : 현역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률이 높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2-4 : 현역 국회의원의 입법공약 이행률이 높을수록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2 절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 즉 공천과 재선에 정책 요인이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공천 여부(공천/낙천)”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당선 여부(당선/낙선)”다.

모두 범주형 변수인 종속변수와 관련한 빈도분석은 아래와 같다. 전체 연구 범위 대상자 217명 중 공천 143명, 낙천 74명, 당선 113명, 낙선 104명이다.

<표1> 종속변수의 빈도분석

구분(n=217)		n	백분위	누적 백분위
공천	공천	143	65.9	65.9
	낙천	74	34.1	100
당선	당선	113	52.1	52.1
	낙선	104	47.9	100

2. 독립변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목표와 결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연속형 변수로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

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구분(n=21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책공약 개수	5	116	35.40	22.406
정책공약 이행률(%)	.00	100.00	48.11	24.540
입법공약 개수	0	37	6.27	6.531
입법공약 이행률(%)	.00	100.00	39.04	36.464

연구 대상자의 정책공약 개수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16개로 나타나 큰 격차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평균 35.40로 분석돼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인 국회의원 217명이 직접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최소 2차례에 걸쳐 회신해 직접 작성한 개수다.

본 연구에서 정책공약 개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고, 가장 적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다. 이는 국회의원마다 공약의 개념을 다소 다르게 해석해 개수를 분류한 것으로 표준편차가 커진 원인이다.

정책공약 이행률의 경우 1개도 이행하지 않아 0%를 기록한 의원은 7명(3.2%)이었고, 100%를 기록한 의원은 3명(1.4%)이었다. 평균 정책공약 이행률은 48.11%로 나타났다. 이행률 역시 표준편차는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났다.

정책공약 개수의 경우 왜도는 1.083, 첨도는 0.826이었고, 정책공약 이행률의 경우 왜도는 0.061, 첨도는 -0.731로 나타나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공약 개수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정책공약 이행률은 평균에 가깝게 분포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입법공약 개수의 경우 왜도는 1.753, 첨도는 3.765였고, 입법공약 이행률의 경우 왜도는 0.453, 첨도는 -1.143으로 나타나 역시 두 변수 모

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변수 외에 나머지는 모두 통제하기로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직 1997; 윤종빈 2002; 한정택 2007; 황아란 1997).

특히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국 정치 지형의 특성을 감안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에 포함됐는지, 대구시·경상북도,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영남권에 포함됐는지, 광주시·전라북도·전라남도 등 호남권에 포함됐는지, 대전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에 포함됐는지 지역별 변수도 통제변수로 구분했다.

이밖에도 후보자 요인에 해당되는 나이와 성별, 학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정치 환경에 해당되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 당선 횟수, 상임위원장 역임 여부, 집권정당 소속 여부도 통제변수로 넣었다.

연속형 통제변수의 기술통계와 범주형 통제변수의 빈도분석은 아래와 같다.

<표3> 연속형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구분(n=21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이	43	78	59.94	6.397

<표4> 범주형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구분(n=217)		n	백분위	누적 백분위
성별	남	196	90.3	90.3
	여	21	9.7	100.0
학력	고졸	1	.5	.5
	대졸	93	42.9	43.3
	대학원 이상	123	56.7	100.0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82	37.8	37.8
	더불어민주당	105	48.4	86.2
	그 외 정당	21	9.7	95.9
	무소속	9	41.1	100.0
선수	초선	85	39.2	39.2
	재선	54	24.9	64.1
	3선	38	17.5	81.6
	4선 이상	40	18.4	100.0
상임위원장	위원장	42	19.4	19.4
	위원	175	80.6	100.0
집권정당	여당	105	48.4	48.4
	야당	112	51.6	100.0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104	47.9	47.9
	비수도권	113	52.1	100.0
영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영남	56	25.8	25.8
	비영남	161	74.2	100.0
호남 (광주전북전남)	호남	25	11.5	11.5
	비호남	192	88.5	100.0
충청 (대전충북충남)	충청	23	10.6	10.6
	비충청	194	89.4	100.0

위와 같은 변수 외에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되는 법안 발의 개수, 본회의 출석률 등은 현직 의원의 재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박명호 김민선 2008; 최병윤 2015; 한정택 2007)를 감안해 통제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요인보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제시한 후보자의 학력, 집권정당 여부 등이 선거에서의 재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증명되기도 했다(최병윤, 2015).

제 3 절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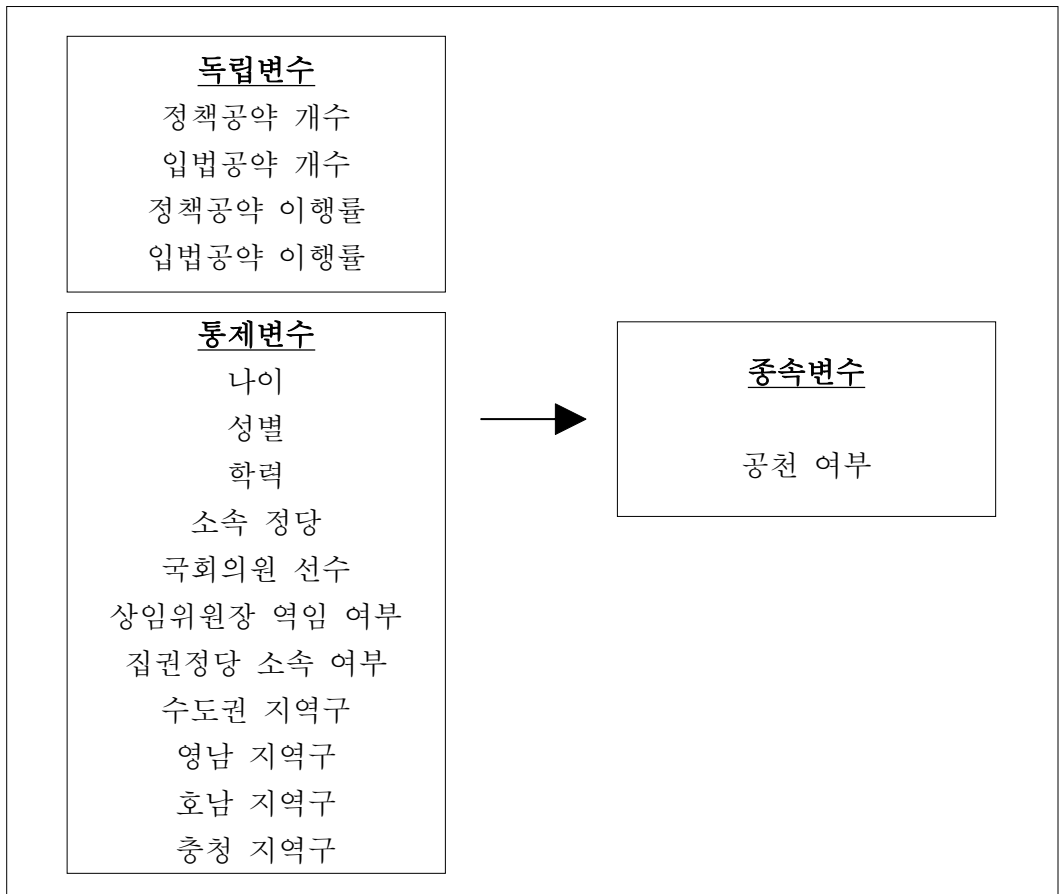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과 당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검토한 종속변수(공천 여부, 당선 여부)와 독립변수(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통제변수(나이, 성별, 학력, 소속 정당, 국회의원 선수, 상임위원장 역임 여부, 집권정당 소속 여부, 지역구가 수도권권, 영남, 호남, 충청에 속해있는지)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천과 당선 모두 종속변수가 0와 1만 갖는 이항변수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을 실시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항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 중 정책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약은 크게 정책공약과 입법공약으로 분리했고, 개수와 이행률 또한 구분해 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히 개수를 많이 제시하는 행위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구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다.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1> 연구 모형 1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Logit } Y(\text{공천 여부 : 공천} = 1, \text{낙천} = 0) \\
 & = \alpha + \beta_1 \text{정책공약 개수} + \beta_2 \text{입법공약 개수} + \beta_3 \text{정책공약 이행률} \\
 & + \beta_4 \text{입법공약 이행률} + \beta_5 \text{나이} + \beta_6 \text{성별} + \beta_7 \text{학력} + \beta_8 \text{소속} \\
 & \text{정당} + \beta_9 \text{국회의원 선수} + \beta_{10} \text{상임위원장} + \beta_{11} \text{집권정당 여부} + \\
 & \beta_{12} \text{수도권} + \beta_{13} \text{영남} + \beta_{14} \text{호남} + \beta_{15} \text{충청} + \epsilon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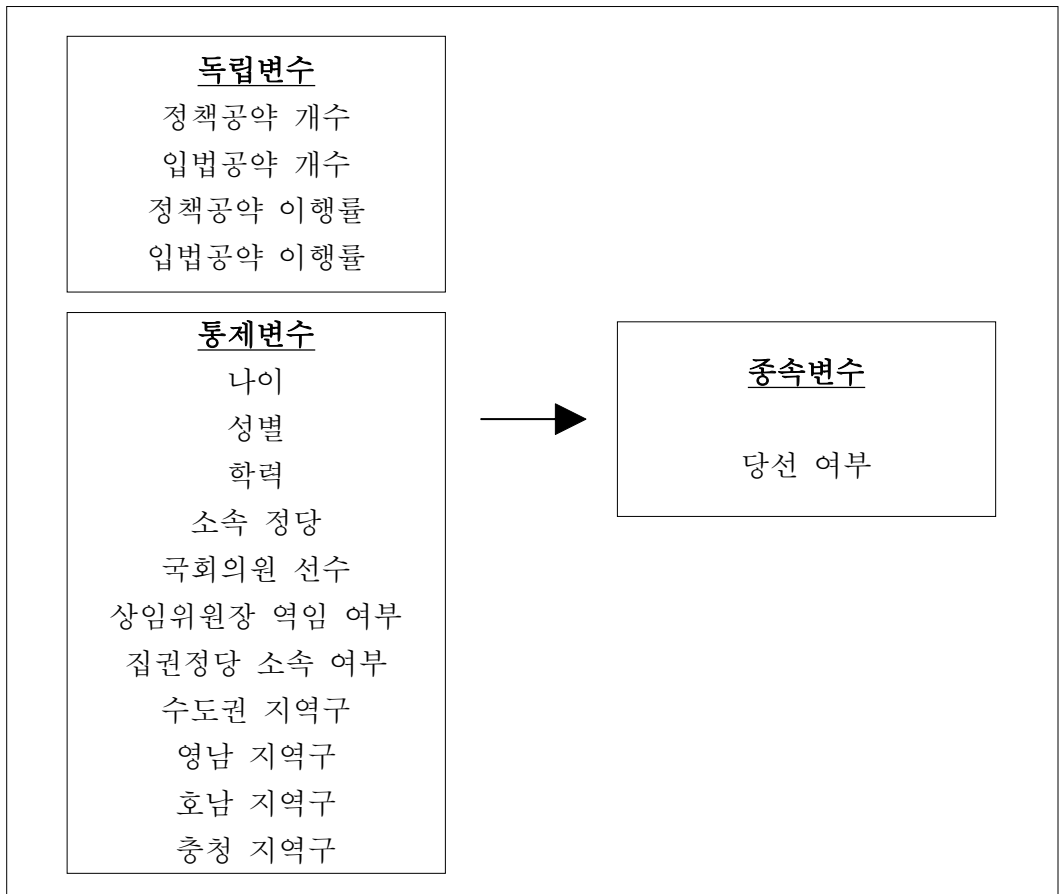
이하 변수들에 대한 조작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5>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종속 변수	공천여부	21대 총선 공천 여부 (공천=1, 낙천=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정책공약 개수	전체 정책공약 개수	
독립 변수	입법공약 개수	전체 입법공약 개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정책공약 이행률	전체 정책공약 이행률 (%)	
	입법공약 이행률	전체 입법공약 이행률 (%)	
	나이	후보자의 당시 나이	
통제 변수	성별	후보자의 성별 (남=1, 여=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학력	후보자의 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 이상=3)	
	소속정당	후보자의 정당 (미래통합당=0, 더불어민주당=1, 그 외 정당=2, 무소속=3)	
	선수	국회의원 선수 (초선=0, 재선=1, 3선=2, 4선 이상=3)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상임위원장 여부 (위원장=1, 위원=0)	
	집권정당	선거 당시 집권정당 소속 여부 (여당=1, 야당=0)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수도권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소속 여부 (수도권=1, 비수도권=0)	
	영남	국회의원 지역구가 대구시·경상북도,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소속 여부 (영남=1, 비영남=0)	
	호남	국회의원 지역구가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소속 여부 (호남=1, 비호남=0)	
	충청	국회의원 지역구가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소속 여부 (충청=1, 비충청=0)	

<그림2> 연구 모형 2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Logit } Y(\text{선거 결과 : 당선} = 1, \text{낙선} = 0) \\
 & = \alpha + \beta_1 \text{정책공약 개수} + \beta_2 \text{입법공약 개수} + \beta_3 \text{정책공약 이행률} \\
 & + \beta_4 \text{입법공약 이행률} + \beta_5 \text{나이} + \beta_6 \text{성별} + \beta_7 \text{학력} + \beta_8 \text{소속 정당} \\
 & + \beta_9 \text{국회의원 선수} + \beta_{10} \text{상임위원장} + \beta_{11} \text{집권정당 여부} \\
 & + \beta_{12} \text{수도권} + \beta_{13} \text{영남} + \beta_{14} \text{호남} + \beta_{15} \text{충청} + \varepsilon
 \end{aligned}$$

이하 변수들에 대한 조작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6>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종속 변수	당선여부	21대 총선 당선 여부 (당선=1, 낙선=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독립 변수		
독립 변수	정책공약 개수	전체 정책공약 개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입법공약 개수	전체 입법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전체 정책공약 이행률 (%)	
	입법공약 이행률	전체 입법공약 이행률 (%)	
통제 변수	나이	후보자의 당시 나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성별	후보자의 성별 (남=1, 여=0)	
	학력	후보자의 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 이상=3)	
	소속정당	후보자의 정당 (미래통합당=0, 더불어민주당=1, 그 외 정당=2, 무소속=3)	
	선수	국회의원 선수 (초선=0, 재선=1, 3선=2, 4선 이상=3)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상임위원장 여부 (위원장=1, 위원=0)	
	집권정당	선거 당시 집권정당 소속 여부 (여당=1, 야당=0)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수도권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소속 여부 (수도권=1, 비수도권=0)	
	영남	국회의원 지역구가 대구시·경상북도,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소속 여부 (영남=1, 비영남=0)	
	호남	국회의원 지역구가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소속 여부 (호남=1, 비호남=0)	
	충청	국회의원 지역구가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소속 여부 (충청=1, 비충청=0)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공천을 받고, 당선 되는 과정에 의정 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이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첫 번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공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두 번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의정활동 성과 독립변수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 가설과 같이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등 의정활동 성과가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의정활동 성과 외에 다른 요인이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원인 역시 자세하게 기술한다.

반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본 연구 모형이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이항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당선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두 번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대상자를 공천을 받은 이들로 한정해 추가 분석을 실시해본다. 또한, 통제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독립변수 중 정책공약 개수와 입법공약 개수 등 2개 독립변수로만 모형을 검증하고, 정책공약 이행률과 입법공약 이행률 등 2개 독립변수로만 추가로 모형을 검증해본다.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도 의정활동 성과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간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가 선거 결과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정당 정책위원회 또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당 정책위원회 소

속 사무처 직원, 정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보충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대상 표본은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253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보를 토대로 SPSS 26.0을 이용했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

1. 독립표본 t-검정 분석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해 표본에서 조사된 변수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인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을 사용했다. 독립변수는 명목척도, 종속변수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집권여당에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집권정당’ 여부가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등 본 연구 주요 독립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정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는지에 따라 본 연구 주요 독립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고, 지역별 변수인 수도권 여부, 영남 여부, 호남 여부, 충청 여부에 따라 본 연구 주요 독립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했다.

t값은 두 집단 차이의 평균을 표준오차로 나눈 값으로 t값이 커질수록 표준정규분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귀무가설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없을 것’, 대립가설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을 것’ 이라면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7> 집권정당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집권정당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여당	105	39.47	23.12	-2.626**	0.009
	야당	112	31.58	21.11		
정책공약 이행률	여당	105	48.42	23.14	-0.182	0.856
	야당	112	47.81	25.89		
입법공약 개수	여당	105	6.59	5.83	-0.705	0.482
	야당	112	5.96	7.14		
입법공약 이행률	여당	105	39.79	36.17	-0.290	0.772
	야당	112	38.35	36.88		

*:p<.05, **:p<.01

첫 번째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는 집권정당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은 105명, 그 외에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기타 정당 소속 의원은 112명이다. 집권정당 여부에 따라 정책공약 개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626$, $p<.01$), 여당일 경우 평균 39.47개, 야당일 경우 평균 31.58개의 정책공약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모두 집권정당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8> 상임위원장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상임 위원장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위원장	42	38.48	22.88	-0.992	0.322
	위원	175	34.66	22.29		
정책공약 이행률	위원장	42	52.14	27.05	-1.186	0.237
	위원	175	47.14	23.88		
입법공약 개수	위원장	42	6.36	6.23	-0.099	0.921
	위원	175	6.25	6.62		
입법공약 이행률	위원장	42	46.01	38.36	-1.382	0.169
	위원	175	37.37	35.91		

두 번째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낼 수 없었다.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은 42명,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은 175명이었다.

<표9> 수도권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수도권	104	39.32	22.76	-2.503*	0.013
	비수도권	113	31.79	21.55		
정책공약 이행률	수도권	104	48.41	23.81	-0.172	0.864
	비수도권	113	47.83	25.30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입법공약 개수	수도권	104	6.13	6.46	0.286	0.775
	비수도권	113	6.39	6.62		
입법공약 이행률	수도권	104	38.32	37.30	0.281	0.779
	비수도권	113	39.71	35.83		

*:p<.05

세 번째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는 연구 대상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속하는 수도권이었는지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지역구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속하는 수도권 의원은 104명, 그 외 지역에 속하는 비수도권 의원은 113명이었다. 수도권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책공약 개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503$, $p<.05$), 수도권일 경우 평균 39.32개, 비수도권일 경우 평균 31.79개의 정책공약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모두 수도권에 속했는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10> 영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영남	56	29.23	21.31	2.417*	0.016
	비영남	161	37.54	22.44		
정책공약 이행률	영남	56	51.45	25.83	-1.184	0.238
	비영남	161	46.95	24.05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입법공약 개수	영남	56	3.88	3.74	4.307***	0.000
	비영남	161	7.10	7.08		
입법공약 이행률	영남	56	38.58	36.43	0.110	0.913
	비영남	161	39.21	36.59		

*:p<.05, **:p<.01, ***:p<.001

네 번째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는 연구 대상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대구시, 경상북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 속하는 영남권 의원이었는지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지역구가 영남권에 속하는 의원은 56명, 그 외 지역에 속하는 비영남권 의원은 161명이었다. 영남에 속하는지에 따라 정책공약 개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417, p<.05), 영남일 경우 평균 29.23개, 비영남일 경우 평균 37.54개의 정책공약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여부에 따라선 평균 7.53개 차이가 났지만, 영남 여부에 따라선 평균 8.31개로 나타났다.

입법공약 개수 역시 영남에 속하는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307, p<.001). 영남일 경우 평균 3.88개, 비영남일 경우 평균 7.10개를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이행률 모두 영남에 속했는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11> 호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호남	25	27.32	17.23	1.928	0.055
	비호남	192	36.45	22.82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이행률	호남	25	46.76	27.71	0.291	0.772
	비호남	192	48.28	24.17		
입법공약 개수	호남	25	10.20	8.38	-2.565*	0.016
	비호남	192	5.76	6.09		
입법공약 이행률	호남	25	38.76	33.61	0.042	0.966
	비호남	192	39.08	36.90		

*:p<.05

다섯 번째 분석 결과 입법공약 개수는 연구 대상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속하는 호남권 의원이었는지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지역구가 호남권에 속하는 의원은 25명, 그 외 지역에 속하는 비호남권 의원은 192명이었다. 호남에 속하는지에 따라 입법공약 개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565, p<.05), 호남일 경우 평균 10.20개, 비호남일 경우 평균 5.76개의 입법공약을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도권, 영남에 속했는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정책공약 개수는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이행률과 마찬가지로 호남에 속했는지에 따라선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12> 충청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개수	충청	23	43.43	25.81	-1.830	0.069
	비충청	194	34.44	21.85		

변수	수도권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책공약 이행률	충청	23	42.52	22.68	1.155	0.249
	비충청	194	48.77	24.72		
입법공약 개수	충청	23	7.39	7.13	-0.873	0.384
	비충청	194	6.13	6.46		
입법공약 이행률	충청	23	38.62	39.29	0.059	0.953
	비충청	194	39.10	36.22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위와 같이 연구 대상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속하는 충청권 의원이었는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일원배치 분산분석

앞서 표본이 2개 이하인 경우 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과 달리 표본이 3개 이상일 경우 평균값을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했다. 독립변수는 3개 이상의 표본으로 구성된 명목척도, 종속변수는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구성돼야 한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 국회의원이 고졸, 대졸, 대학원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등 본 연구 주요 독립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정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인지, 재선, 3선, 4선 이상 당선된 의원인지에 따라 본 연구 주요 독립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지 분석했다.

<표13> 학력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변수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책공약 개수	고졸	1	20.00	-	0.522	0.594
	대졸	93	34.14	21.03		
	대학원 이상	123	36.47	23.47		
정책공약 이행률	고졸	1	65.00	-	0.425	0.654
	대졸	93	46.85	22.71		
	대학원 이상	123	48.92	25.94		
입법공약 개수	고졸	1	2.00	-	0.246	0.782
	대졸	93	6.42	7.34		
	대학원 이상	123	6.19	5.90		
입법공약 이행률	고졸	1	100.00	-	1.674	0.190
	대졸	93	40.82	37.87		
	대학원 이상	123	37.21	35.16		

첫 번째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 국회의원 중 고졸 이상은 1명, 대학 졸업 이상은 93명, 대학원 졸업 이상은 123명으로 위와 같이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을 제시하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14> 선수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변수	선수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책공약 개수	초선	85	30.98	20.47	1.936	0.125
	재선	54	37.61	23.27		
	3선	38	37.45	23.14		
	4선 이상	40	39.85	23.68		

변수	선수	n	평균	표준편차	F	p
정책공약 이행률	초선	85	44.88	23.77	2.080	0.104
	재선	54	46.76	23.70		
	3선	38	56.54	26.40		
	4선 이상	40	48.78	24.46		
입법공약 개수	초선	85	6.69	6.88	0.266	0.850
	재선	54	6.30	7.30		
	3선	38	5.87	5.56		
	4선 이상	40	5.70	5.61		
입법공약 이행률	초선	85	37.31	34.08	0.367	0.777
	재선	54	38.50	38.82		
	3선	38	44.60	36.65		
	4선 이상	40	38.19	38.76		

두 번째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은 85명, 재선 의원은 54명, 3선 의원은 38명, 4선 이상 의원은 50명이었다. 선수별로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은 위와 같이 제시하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상관분석

연속형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변수 간에 독립적인 관계 또는 상관된 관계인지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실행하는 예비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실시했다.

<표15>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1. 정책공약 개수	1					
2. 정책공약 이행률	.087	1				
3. 입법공약 개수	.330***	.006	1			
4. 입법공약 이행률	.138*	.328***	.109	1		

*:p<.05, **:p<.01, ***:p<.001

전체 연구 대상자 국회의원 217명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는 입법공약 개수($r=.330$, $p<.001$), 입법공약 이행률($r=.138$,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책공약 이행률은 입법공약 이행률($r=.328$,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정책공약 이행률과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개수와 입법공약 이행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달리 본 연구 통제변수의 경우 연속형 변수는 나이 밖에
없어 통제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제 2 절 모형 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본 연구와 같이 연속형 독립변수가 범주형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특히 종속변수의 변수값이 공천/낙천, 당선/낙선 등 이항계수인 0과 1인 경우에 해당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Cox, 1958). 선형이 아닌 곡선의 특성을 나타내며 모형에 대한 검정으로 카이제곱을 활용한다. 유의확률 p값은 유의수준(0.05)보다 작게 나타나야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1. 연구모형 1에 대한 검정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 대상인 20대 국회의원 217명의 의정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후보자로 공천 받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6>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4	0.009	1	0.611	0.996
정책공약 이행률	0.003	0.007	1	0.663	1.003
입법공약 개수	-0.009	0.028	1	0.761	0.992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05	1	0.550	0.997

n=217	B	S.E.	자유도	p	Exp(B)
나이	-0.089	0.030	1	0.003	0.915**
성별	0.256	0.554	1	0.644	1.292
학력	0.211	0.330	1	0.522	1.235
정당	0.155	0.237	1	0.514	1.167
선수	-0.326	0.170	1	0.055	0.722
상임위원장	-0.172	0.425	1	0.685	0.842
집권정당	0.918	0.399	1	0.021	2.503*
수도권	0.654	0.842	1	0.437	1.923
영남	0.515	0.850	1	0.544	1.674
호남	-0.097	0.920	1	0.916	0.907
충청	1.889	1.009	1	0.061	6.613
상수	4.763	2.193	1	0.030	117.055
카이제곱	14.961 (p=.060)				
-2LL	230.000				
Nagelkerke R ²	.277				

*:p<.05, **:p<.01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27.7%로 나타났다 (Nagelkerke R²=.277).

Exp(B)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해당 독립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킬 경우 낙천할 확률보다 공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며 Odds ratio(오즈비 · OR)로 표현하기도 한다.

회귀계수(B)값이 0보다 크면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공천=1, 낙천=0).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회귀계수(B)의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 변수의 경우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값이 0인 집단(낙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0.915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공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또한 집권정당 변수의 경우 회귀계수(B)가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2.503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집권정당에 속한 의원일수록 공천 받았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표16-1> 이행률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5	0.009	1	0.595	0.995
입법공약 개수	-0.009	0.028	1	0.738	0.991
나이	-0.089	0.029	1	0.002	0.914**
성별	0.246	0.553	1	0.656	1.279
학력	0.242	0.325	1	0.458	1.273
정당	0.159	0.232	1	0.493	1.173

n=217	B	S.E.	자유도	p	Exp(B)
선수	-0.316	0.168	1	0.060	0.729
상임위원장	-0.188	0.422	1	0.657	0.829
집권정당	0.908	0.395	1	0.022	2.478*
수도권	0.712	0.832	1	0.393	2.038
영남	0.570	0.842	1	0.499	1.768
호남	-0.039	0.910	1	0.966	0.962
충청	1.919	1.003	1	0.056	6.813
상수	4.726	2.158	1	0.029	112.862
카이제곱	12.479(p=.131)				
-2LL	230.435				
Nagelkerke R ²	.275				

*:p<.05, **:p<.01

연구모형 1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유의하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검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책공약 이행률과 입법공약 이행률을 제외하고 각각 개수만 독립변수로 설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2개 모두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2> 개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이행률	0.003	0.007	1	0.702	1.003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05	1	0.487	0.997

n=217	B	S.E.	자유도	p	Exp(B)
나이	-0.090	0.029	1	0.002	0.914**
성별	0.274	0.553	1	0.620	1.315
학력	0.180	0.326	1	0.581	1.197
정당	0.125	0.231	1	0.589	1.133
선수	-0.333	0.167	1	0.045	0.717*
상임위원장	-0.156	0.424	1	0.712	0.855
집권정당	0.903	0.397	1	0.023	2.466*
수도권	0.619	0.837	1	0.460	1.857
영남	0.537	0.847	1	0.526	1.710
호남	-0.105	0.920	1	0.909	0.900
충청	1.812	1.001	1	0.070	6.124
상수	4.764	2.187	1	0.029	117.203
카이제곱	9.108(p=.333)				
-2LL	230.528				
Nagelkerke R ²	.274				

*:p<.05, **:p<.01

반대로 정책공약 개수와 입법공약 개수를 제외하고 각각 이행률만 독립변수로 설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위에서 실시했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2개 모두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3> 통제변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1	0.007	1	0.896	0.999
정책공약 이행률	0.000	0.006	1	0.970	1.000
입법공약 개수	-0.003	0.023	1	0.891	0.997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04	1	0.479	0.997
상수	0.817	0.388	1	0.035	2.263
카이제곱	4.600(p=.799)				
-2LL	277.845				
Nagelkerke R ²	.004				

추가로 모든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 4개만 설정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으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4>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04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9	0.012	1	0.483	0.991
정책공약 이행률	0.001	0.012	1	0.947	1.001
입법공약 개수	-0.005	0.041	1	0.895	0.995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07	1	0.714	1.003
나이	-0.112	0.046	1	0.013	0.894*
성별	0.178	0.599	1	0.766	1.195
학력	0.098	0.523	1	0.852	1.103
정당	-0.574	0.571	1	0.315	0.563

n=104	B	S.E.	자유도	p	Exp(B)
선수	-0.151	0.272	1	0.579	0.860
상임위원장	-0.469	0.596	1	0.432	0.626
집권정당	1.274	0.686	1	0.063	3.577
상수	7.419	3.420	1	0.030	1666.772
카이제곱	20.486(p=.039)				
-2LL	104.474				
Nagelkerke R ²	.256				

*:p<.05

본 연구 대상 20대 국회의원 217명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수도권에 속한 의원 104명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25.6%(Nagelkerke R²=.256)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앞서 실시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B)의 절대값이 매우 작게 나타났고,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수도권 지역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 변수의 경우 전체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냈고, Exp(B)는 0.894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공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그 밖의 다른 통제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영남권 소속 의원은 56명, 호남권 소속 의원은 25명, 충청권 소속 의원은 23명에 불과해 별도로 이들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표16-5>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0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9	0.011	1	0.448	0.991
정책공약 이행률	0.002	0.011	1	0.860	1.002
입법공약 개수	0.000	0.039	1	0.993	1.000
입법공약 이행률	0.004	0.007	1	0.621	1.004
나이	-0.102	0.041	1	0.014	0.903*
성별	0.235	0.592	1	0.691	1.265
학력	0.146	0.501	1	0.771	1.157
정당	-0.106	0.495	1	0.830	0.899
선수	-0.130	0.253	1	0.607	0.878
상임위원장	-0.323	0.599	1	0.590	0.724
집권정당	0.884	0.586	1	0.131	2.420
상수	6.308	2.986	1	0.035	549.088
카이제곱	5.705(p=.680)				
-2LL	111.797				
Nagelkerke R ²	.228				

*:p<.05

추가로 유권자 소득수준에 따라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위와 같이 재설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 대상 국회의원 217명이 속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9년 지역별 개인소득이 같은 해 전국 평균인 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 10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등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6>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0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9	0.013	1	0.505	1.009
정책공약 이행률	0.000	0.009	1	0.972	1.000
입법공약 개수	-0.029	0.039	1	0.450	0.971
입법공약 이행률	-0.008	0.007	1	0.223	0.992
나이	-0.062	0.041	1	0.125	0.940
성별	0.015	1.807	1	0.993	1.015
학력	0.179	0.455	1	0.693	1.196
정당	-0.032	0.240	1	0.893	0.968
선수	-0.443	0.225	1	0.049	0.642*
상임위원장	-0.105	0.616	1	0.864	0.900
집권정당	1.381	0.597	1	0.021	3.977*
상수	4.233	3.124	1	0.175	68.919
카이제곱	6.136(p=.632)				
-2LL	120.785				
Nagelkerke R ²	.281				

*:p<.05

반대로 2019년 지역별 개인소득이 같은 해 전국 평균인 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 110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수 변수의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내 내부값이 0인 집단(낙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0.642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선수가 높을수록 공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5$).

<표16-7>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8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8	0.013	1	0.539	0.992
정책공약 이행률	0.012	0.010	1	0.220	1.012
입법공약 개수	-0.016	0.040	1	0.685	0.984
입법공약 이행률	-0.012	0.007	1	0.074	0.988
나이	-0.078	0.040	1	0.050	0.925*
성별	0.402	0.679	1	0.554	1.494
학력	0.642	0.472	1	0.173	1.901
정당	0.223	0.302	1	0.461	1.249
선수	-0.424	0.239	1	0.076	0.655
상임위원장	-0.719	0.628	1	0.252	0.487
집권정당	1.654	0.603	1	0.006	5.227**
상수	3.182	2.708	1	0.240	24.103
카이제곱	8.044 (p=.429)				
-2LL	120.050				

n=118	B	S.E.	자유도	p	Exp(B)
Nagelkerke R ² .383					

*:p<.05, **:p<.01

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 대상을 위와 같이 재분류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 대상 국회의원 217명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중 21대 국회의원 원 선거 투표율이 전국 평균 66.2% 이상인 지역에 속한 국회의원 118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등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내 내부값이 0인 집단(낙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0.925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공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집권정당 여부의 경우 회귀계수(B)가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5.227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공천)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즉,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권정당에 속한 의원일수록 공천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표16-8> 극단값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0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0	0.013	1	0.987	1.000

n=110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이행률	0.013	0.013	1	0.307	1.013
입법공약 개수	-0.007	0.038	1	0.849	0.993
입법공약 이행률	-0.007	0.013	1	0.622	0.993
나이	-0.026	0.045	1	0.561	0.974
성별	0.117	0.883	1	0.895	1.124
학력	0.206	0.548	1	0.708	1.228
정당	0.340	0.357	1	0.341	1.405
선수	-0.734	0.284	1	0.010	0.480**
상임위원장	0.248	0.673	1	0.713	1.281
집권정당	1.311	0.563	1	0.020	3.710*
수도권	-0.113	1.179	1	0.924	0.894
영남	0.042	1.230	1	0.973	1.043
호남	-1.061	1.324	1	0.423	0.346
충청	0.970	1.411	1	0.492	2.637
상수	1.313	3.061	1	0.668	3.719
카이제곱	5.474 (p=.706)				
-2LL	113.326				
Nagelkerke R ²	.315				

*:p<.05, **:p<.01

공약 개수가 0개, 이행률이 0%와 100%에 해당되는 105명을 제외하고 112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나머지 분석과 다르지 않았다.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극단값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프로빗 모형 분석을 통해 추가 검정을 실시했다.

<표17> 공천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n=217	추정값	표준화오류	Z	p
정책공약	-0.001	0.005	-0.119	0.906
정책공약 이행률	-0.003	0.004	-0.751	0.452
입법공약	0.004	0.016	0.217	0.828
입법공약 이행률	0.001	0.003	0.503	0.615
나이	0.034	0.017	2.083*	0.037
성별	-0.175	0.324	-0.538	0.590
학력	-0.153	0.191	-0.804	0.421
정당	-0.071	0.141	-0.504	0.614
선수	0.192	0.099	1.933	0.053
상임위원장	-0.091	0.252	-0.363	0.716
집권정당	0.427	0.234	1.826	0.068
수도권	-0.026	0.514	-0.050	0.960
영남	-0.099	0.522	-0.189	0.850
호남	-0.372	0.559	-0.665	0.506
충청	0.423	0.580	0.729	0.466
절편	-2.171	1.924	-1.128	0.259
카이제곱검정	208.899 (p=.336)			

*:p<.05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2에 대한 검정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 대상인 20대 국회의원 217명의 의정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8>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9	0.009	1	0.314	0.991
정책공약 이행률	0.003	0.007	1	0.682	1.003
입법공약 개수	0.003	0.029	1	0.924	1.003
입법공약 이행률	0.001	0.005	1	0.822	1.001
나이	-0.055	0.029	1	0.061	0.946
성별	0.234	0.557	1	0.674	1.264
학력	0.201	0.323	1	0.534	1.223
정당	0.052	0.251	1	0.837	1.053
선수	-0.402	0.175	1	0.021	0.669*
상임위원장	0.052	0.445	1	0.908	1.053
집권정당	1.777	0.404	1	0.000	5.910***

n=217	B	S.E.	자유도	p	Exp(B)
수도권	-0.963	0.897	1	0.283	0.382
영남	-0.549	0.899	1	0.542	0.578
호남	-1.958	1.008	1	0.052	0.141
충청	-0.038	0.995	1	0.970	0.963
상수	3.171	2.211	1	0.152	23.822
카이제곱	34.787(p=.000)				
-2LL	235.667				
Nagelkerke R ²	.344				

*:p<.05, **:p<.01, ***:p<.001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34.4%로 나타났다(Nagelkerke R²=.344).

Exp(B)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해당 독립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킬 경우 낙선할 확률보다 당선될 확률이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회귀계수(B)값이 0보다 크면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당선=1, 낙선=0).

분석 결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연구모형 1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B)의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모형 1과는 달리 나이는 당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수 변수의 경우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값이 0인 집단(낙선)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0.669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당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선수가 높을수록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또한 집권정당 여부를 코딩한 변수의 경우 회귀계수(B)가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부값이 1인 집단(당선)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5.910로 1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당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집권정당에 속한 의원일수록 당선됐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표18-1> 이행률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8	0.008	1	0.349	0.992
입법공약 개수	0.004	0.029	1	0.903	1.004
나이	-0.055	0.029	1	0.062	0.947
성별	0.242	0.555	1	0.662	1.274
학력	0.195	0.319	1	0.541	1.215
정당	0.035	0.248	1	0.888	1.036
선수	-0.395	0.173	1	0.023	0.674*
상임위원장	0.076	0.442	1	0.864	1.078
집권정당	1.788	0.403	1	0.000	5.980***
수도권	-0.984	0.895	1	0.272	0.374
영남	-0.551	0.897	1	0.539	0.577
호남	-1.956	1.007	1	0.052	0.141
충청	-0.083	0.993	1	0.934	0.921

n=217	B	S.E.	자유도	p	Exp(B)
상수	3.319	2.193	1	0.130	27.639
카이제곱	21.831 (p=.005)				
-2LL	235.974				
Nagelkerke R ²	.343				

*:p<.05, **:p<.01, ***:p<.001

연구모형 1과 마찬가지로 연구모형 2 또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유의하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검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책공약과 입법공약 이행률을 제외하고 독립변수 2개만 설정해 추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실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책공약 개수, 입법공약 개수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8-2> 개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이행률	-0.008	0.008	1	0.349	0.992
입법공약 이행률	0.004	0.029	1	0.903	1.004
나이	-0.055	0.029	1	0.062	0.947
성별	0.242	0.555	1	0.662	1.274
학력	0.195	0.319	1	0.541	1.215
정당	0.035	0.248	1	0.888	1.036
선수	-0.395	0.173	1	0.023	0.674*
상임위원장	0.076	0.442	1	0.864	1.078

n=217	B	S.E.	자유도	p	Exp(B)
집권정당	1.788	0.403	1	0.000	5.980***
수도권	-0.984	0.895	1	0.272	0.374
영남	-0.551	0.897	1	0.539	0.577
호남	-1.956	1.007	1	0.052	0.141
충청	-0.083	0.993	1	0.934	0.921
상수	3.319	2.193	1	0.130	27.639
카이제곱	21.161 (p=.007)				
-2LL	236.777				
Nagelkerke R ²	.339				

*:p<.05, **:p<.01, ***:p<.001

반대로 정책공약 개수와 입법공약 개수를 제외하고 각각 이행률만 독립변수로 설정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실시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2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개수, 이행률을 제외한 채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독립변수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초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수와 집권정당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18-3> 통제변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1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2	0.006	1	0.754	0.998
정책공약 이행률	0.000	0.006	1	0.955	1.000
입법공약 개수	-0.004	0.022	1	0.874	0.996

n=217	B	S.E.	자유도	p	Exp(B)
입법공약 이행률	0.001	0.004	1	0.831	1.001
상수	0.160	0.365	1	0.662	1.173
카이제곱	17.005(p=.030)				
-2LL	300.254				
Nagelkerke R ²	.001				

추가로 모든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 4개만 설정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8-4> 낙천자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43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6	0.011	1	0.588	0.994
정책공약 이행률	-0.003	0.010	1	0.802	0.997
입법공약 개수	-0.015	0.039	1	0.702	0.985
입법공약 이행률	0.004	0.007	1	0.535	1.004
나이	0.036	0.045	1	0.421	1.037
성별	-0.018	0.812	1	0.982	0.982
학력	0.556	0.488	1	0.255	1.743
정당	-0.377	0.306	1	0.218	0.686
선수	-0.227	0.262	1	0.386	0.797
상임위원장	-0.550	0.675	1	0.415	0.577
집권정당	2.455	0.527	1	0.000	11.650***
상수	-2.661	3.066	1	0.386	0.070

n=143	B	S.E.	자유도	p	Exp(B)
카이제곱	6.679(p=.572)				
-2LL	126.439				
Nagelkerke R ²	.305				

*:p<.05, **:p<.01, ***:p<.001

연구모형 1과 다르게 연구모형 2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은 143명(당선=108명, 낙선=35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다. 앞서 실시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았던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역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 중에서는 여전히 집권정당 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p<.0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는 2.455로 양(+)의 값을 나타냈고, Exp(B)는 11.650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집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을수록 당선됐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18-5> 수도권 지역에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04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18	0.014	1	0.181	0.982
정책공약 이행률	0.008	0.013	1	0.527	1.008
입법공약 개수	0.053	0.045	1	0.241	1.054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08	1	0.730	1.003
나이	-0.061	0.048	1	0.199	0.941
성별	0.385	0.637	1	0.546	1.470
학력	-0.197	0.545	1	0.718	0.822
정당	1.067	0.528	1	0.043	2.906*

n=104	B	S.E.	자유도	p	Exp(B)
선수	-0.435	0.291	1	0.134	0.647
상임위원장	0.328	0.653	1	0.615	1.388
집권정당	2.410	0.697	1	0.001	11.133***
상수	1.832	3.485	1	0.599	6.245
카이제곱	2.871 (p=.942)				
-2LL	95.586				
Nagelkerke R ²	.481				

*:p<.05, **:p<.01, ***:p<.001

연구모형 1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대상 국회의원 217명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수도권에 속한 의원 104명을 대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48.1%(Nagelkerke R²=.48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앞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B)의 절대값이 매우 작게 나타났고,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수도권 지역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정당 여부의 경우 전체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B)가 양(+)의 값을 나타냈고, Exp(B)는 11.133으로 1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집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을수록 당선됐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모형 1과 마찬가지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소속 의원만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표18-6>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07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23	0.013	1	0.082	0.977
정책공약 이행률	0.008	0.013	1	0.531	1.008
입법공약 개수	0.068	0.042	1	0.105	1.070
입법공약 이행률	0.009	0.008	1	0.274	1.009
나이	-0.037	0.045	1	0.406	0.963
성별	0.251	0.648	1	0.698	1.286
학력	-0.073	0.538	1	0.892	0.930
정당	-0.091	0.682	1	0.893	0.913
선수	-0.366	0.280	1	0.191	0.693
상임위원장	-0.052	0.655	1	0.937	0.949
집권정당	3.281	0.816	1	0.000	26.599***
상수	0.318	3.332	1	0.924	1.375
카이제곱	6.100(p=.636)				
-2LL	98.277				
Nagelkerke R ²	.491				

*:p<.05, **:p<.01, ***:p<.001

연구모형 1과 마찬가지로 유권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대상을 구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9년 지역별 개인소득이 같은 해 전국평균인 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 속한 20대 국회의원 107명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정당 소속 여부는 다른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집권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일수록 당선됐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표18-7>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0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7	0.012	1	0.556	1.007
정책공약 이행률	-0.004	0.009	1	0.687	0.996
입법공약 개수	-0.048	0.041	1	0.246	0.954
입법공약 이행률	-0.006	0.007	1	0.396	0.994
나이	-0.073	0.040	1	0.071	0.930
성별	-0.674	2.019	1	0.739	0.510
학력	0.510	0.448	1	0.255	1.665
정당	-0.330	0.262	1	0.207	0.719
선수	-0.324	0.226	1	0.151	0.723
상임위원장	-0.379	0.654	1	0.563	0.685
집권정당	1.068	0.512	1	0.037	2.909*
상수	4.483	3.180	1	0.159	88.536
카이제곱	7.392(p=.495)				
-2LL	126.236				
Nagelkerke R ²	.283				

*:p<.05

반대로 2019년 지역별 개인소득이 전국평균 미만인 지역에 속한 20대 국회의원 110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4개 모두 여전히 유의확률 0.05 이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실시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집권정당 요인은 위 분석에서도 집권정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일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표18-8>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8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08	0.013	1	0.569	0.992
정책공약 이행률	0.010	0.010	1	0.286	1.010
입법공약 개수	-0.023	0.042	1	0.587	0.977
입법공약 이행률	-0.001	0.007	1	0.918	0.999
나이	-0.063	0.042	1	0.127	0.939
성별	0.193	0.676	1	0.775	1.213
학력	0.718	0.465	1	0.123	2.050
정당	-0.409	0.353	1	0.247	0.664
선수	-0.738	0.264	1	0.005	0.478**
상임위원장	-0.501	0.670	1	0.454	0.606
집권정당	1.654	0.558	1	0.003	5.229**
상수	1.929	2.747	1	0.483	6.880
카이제곱	5.262(p=.729)				
-2LL	120.599				
Nagelkerke R ²	.401				

*:p<.05, **:p<.01

정치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곳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정하기 위해 투표율이 전국 평균 66.2% 이상인 지역에 속한 20대 국회의원 118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앞서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의 경우 회귀계수(B)가 음(-)의 값을 나타내 내부값이 0인 집단(낙선)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Exp(B)는 0.478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당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투표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서는 20대 국회의원의 선수가 높을수록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집권정당 여부 역시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B)가 양(+)의 값이었고 Exp(B)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당선)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집권정당에 속한 20대 국회의원이었을수록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표18-9> 극단값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110	B	S.E.	자유도	p	Exp(B)
정책공약 개수	-0.016	0.014	1	0.247	0.984
정책공약 이행률	0.009	0.014	1	0.520	1.009
입법공약 개수	0.018	0.043	1	0.670	1.019
입법공약 이행률	0.003	0.014	1	0.803	1.003
나이	-0.019	0.050	1	0.710	0.982
성별	-0.261	0.905	1	0.773	0.770
학력	-0.060	0.583	1	0.918	0.942
정당	-1.014	0.676	1	0.133	0.363
선수	-0.576	0.317	1	0.069	0.562
상임위원장	-0.354	0.762	1	0.642	0.702
집권정당	2.749	0.774	1	0.000	15.629***
수도권	-0.414	1.375	1	0.763	0.661

n=110	B	S.E.	자유도	p	Exp(B)
영남	-0.818	1.441	1	0.570	0.441
호남	-1.233	1.673	1	0.461	0.292
충청	0.384	1.521	1	0.801	1.468
상수	1.911	3.498	1	0.585	6.763
카이제곱	7.963(p=.437)				
-2LL	103.995				
Nagelkerke R ²	.475				

*:p<.05, **:p<.01

공약 개수가 0개, 이행률이 0%와 100%에 해당되는 105명을 제외하고 112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나머지 분석과 다르지 않았다. 독립변수 4개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이므로 극단값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결과와 같이 집권정당에 속하는 국회의원이었을수록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표19> 당선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n=217	추정값	표준화오류	Z	p
정책공약	0.004	0.005	0.813	0.416
정책공약 이행률	-0.001	0.004	-0.306	0.760
입법공약	0.000	0.017	0.005	0.996
입법공약 이행률	-0.001	0.003	-0.399	0.690
나이	0.027	0.017	1.647	0.099

n=217	추정값	표준화오류	Z	p
성별	-0.126	0.328	-0.385	0.700
학력	-0.124	0.190	-0.654	0.513
정당	-0.029	0.146	-0.202	0.840
선수	0.218	0.102	2.132*	0.033
상임위원장	0.012	0.266	0.045	0.964
집권정당	0.975	0.232	4.212***	0.000
수도권	-0.500	0.519	-0.963	0.336
영남	-0.308	0.525	-0.588	0.557
호남	-1.038	0.585	-1.775	0.076
충청	-0.050	0.569	-0.088	0.930
절편	-0.587	1.910	-0.308	0.758
카이제곱	214.771 (p=.240)			

*:p<.05, **:p<.01, ***:p<.001

연구모형 1과 같이 연구모형 2 또한 프로빗 모형 분석을 통해 추가 검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 4개 모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의정활동 과정 분석

앞서 살펴본 대로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20, 21대 국회에 걸쳐 재직 중인 정책 관련 정당 소속 사무처 직원 2명,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1명 등 5명과 11월 18~20일 대면 조사, 전화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정활동 성과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약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했다. 특히 인터뷰이가 생각하는 국회 및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소속 정당과 이름 등 인터뷰이가 유추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인터뷰 내용은 별도로 녹취하지 않는 대신 주요 내용을 기술해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 의정활동의 범위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직원이 인식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극히 사적인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처리 및 이해관계 조정 등 대인 활동의 비중을 의정활동의 한 부분으로 적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역시 이와 비슷한 인식을 전제로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해당되는 입법 활동을 가장 주요한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정책 담당 정당 사무처 직원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인 업무 비중보다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입법 기능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지역구 관리에 의정활동 최소 절반 이상을 할애해야 한다. 지역구에서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현역 의원의 최대 강점은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인식되면 다음 선거에서 원외에 있는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지역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2021년 11월, 국회의원 A 씨 인터뷰)

입법기관에서의 정책 기능 전반에 걸쳐 최초 실행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에 속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책공약과 입법공약은 한편으론 의정활동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4년에 걸친 의정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의정활동의 지향점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 간 인식이 엇갈린 대목은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국회의원은 재당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보좌진

의 경우 지향점으로 국회의원 재당선을 언급하면서도 국가 운영에 기틀을 제공하는 행정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사무처 직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했다.

“영감님들(국회 보좌진이 국회의원들을 지칭하는 은어)이 원하는 건 임기 4년 중 단순히 법안 여러 개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개를 통과시키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주목을 끌 수 있는 법안을 본인이 주도하는 것이다. 물론 의원마다, 의원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입장에선 모든 의정활동의 목표는 선거에서 다시 당선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지역구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된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알박기성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 (2021년 11월, 21대 국회의원 보좌관 B 씨)

입법기관의 주축을 이루는 국회의원과 달리 이들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관점에서 자신을 채용한 국회의원의 지향점을 최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보좌진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의정활동 지향점과 달리 국회의원 재당선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입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과 달리 임기 중 지역구 예산 확보 및 정부 사업 유치 등을 주요한 의정활동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에 있다. 집권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정당 소속 후보자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 당선시키려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목적 또한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당선에 국한 되선 안 되고 큰 틀에서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

책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1년 11월, 정당 사무처 소속 직원 C 씨 인터뷰)

반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잃기도 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과 달리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특히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정당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정당 소속 사무처 직원의 경우 국회의원 개인의 당선보다 소속 정당의 집권을 최우선 목표로 의정활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개별 의정활동 역시 궁극적으로 소속 정당의 집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의정활동의 영향

위에서 살펴본 의정활동의 지향점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도 컸다. 본 연구에서는 의정활동 성과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려고 했던 바 인터뷰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근거해 본 연구 주제에 대해 직군별로 제기한 구체적인 의견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총론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의정활동 성과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관적 의견에 해당되지만 이를 직군별 구분 없이 기술했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 의정활동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로 정당의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받는 공천 과정이 본 선거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을 꼽았다. 즉,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는 한국의 선거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 성과가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

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유권자의 투표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적을 변경 여부, 소속 정당의 크기, 후보자의 미디어 출현 빈도 등 다양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한정택, 2007)에서도 법안 발의 등 입법부 본연의 의정활동 기능과 관련된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들 또한 위와 같은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법안 발의와 통과, 본회의 출석률 등과 같은 의정활동 지표는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고, 설사 유권자들에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주요 아젠다가 기본적인 의정활동 성과 지표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채택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자체평가 역시 4년 마다 발표되고 있지만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자체평가 자료 수집 과정부터 발표에 이르는 과정이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에 응한 21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정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천/낙천, 당선/낙선 등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약 개수가 많고, 이행률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의정활동 성과에 해당되는 변수 외에 나이와 성별, 학력, 소속정당, 선수, 상임위원장 역임 여부, 집권정당 소속 여부, 지역구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속했는지 등의 변수는 통제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정책공약 개수, 정책공약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 입법공약 이행률 등 4개 독립변수 모두 선거 결과에 해당되는 공천 여부, 당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했는지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양한 조합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다. 아울러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다양화 해 수도권 및 지역별, 평균 소득이 높거나 낮은 지역,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투영되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 등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정했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정당 사무처 직원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해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봤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국가 정책 입안 및 실행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의 출범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시해왔다. 시민단체들은 후보자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이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약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 문화나 선거 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문제와 관련한 지적은 연일 언론에 제기되고 있다⁹⁾. 본 연구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들이 하여금 공약을 입안하고 이행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와 정책 성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증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가 평가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되면서 정책 성과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선거 문화가 생겨날 수 있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영국 주요 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집을 발간하며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최소한 국회 교섭단체의 경우 책임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설], “청년·여성 확대, 혁신 물갈이 또다시 외면한 총선 공천, 동아일보, 2020-3-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9/100404260/1>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할 수 있다면 진영논리에 따른 선거가 아니라 정책의 비전과 실현 가능성 등을 묻고 따지는 선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공약이행률에 연구를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집권 정부 성향별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과 해당 공약을 정책에 접목시켜 실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책 순응도와 당선률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약 개수와 이행률이 라는 지표로만 산출할 수 없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여러 공약들을 모두 하나의 개별 공약으로 분류했다는 점도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가령, 0~5세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공약을 이행한 것과 지역구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공약 개수와 이행률을 국회의원 본인들이 직접 평가해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정활동 성과가 단순히 공약 개수와 이행률뿐만 아니라 예산배정, 비예산사업 유치,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의정활동 성과와 연결시켜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았다. 특히 정치학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학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1), 33-57.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4(2), 51-67.
- 강주현. (2016). 20대 총선 여성 후보 당선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 강남 을과 병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6(2), 55-88.
- 강황선, & 이명행. (2012). 유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유권자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3), 33-58.
- 구현우. (2013). 정치의 원인으로서의 공공정책: 정책중심적 관점의 정책학적 함의.
- 길정아, & 강원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당파적 편향. 한국정당학회보, 19(4), 101-140.
- 김석우. (2004). 기초단체장 총원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215-231.
- 김석우. (2006). 17대 총선과 정치적 총원 -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87-315.
- 김창진, 김대연, & 허훈. (2019). 기초지방선거 후보자 당선 영향요인 - 거대정당의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4), 125-163.
- 김한나, & 박원호. (2016). 제 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6(2), 51-76.
- 류재성. (2014). 부동산은 누구인가?: 2012년 총선 및 대선, 2014년

- 지방선거 비교 분석. 평화연구, 22(2), 113-144.
-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국제정치(KWP), 13(3), 161.
- 박명호, & 김민선. (2008).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15(1), 161-176.
- _____.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9.
- 박상운. (2018).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의 보완: 의원의 대정부질문 행태와 종합적인 이념 평가방법 제시. 사회과학연구, 34(3), 73-97.
- 박선경. (2020). 21대 총선은 코로나로 결정된 선거인가?: 코로나 대응 평가와 야당심판론에 의한 투표 변경 분석. 현대정치연구, 13(3), 85-118.
- 박윤희, 김민수, 박원호, & 구본상.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49, 117.
- 박창규. (2015). 국회의원선거의 정책선거 여부 분석-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3), 1-26.
- 배은진, & 엄기홍. (2016).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21세기정치학회보, 26(2), 77-97.
- 서정규, & 이현우. (2017). 국회의원의 재선동기와 투표 자율성의 시기적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7(3), 27-50.
- 왕재선. (2016).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지표 탐색. 한국정책연구, 16(3), 43-62.
- 양웅석. (2018).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엄기홍 (2009). 정치자금 스캔들, 유권자 평가, 그리고 현직자 재선 : 1998년과 200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19(1): 171-195.

- 윤종빈. (2000).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3(4), 145-163.
- _____. (2002).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5(4), 129-146.
- _____. (2008). 17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1(1), 59-83.
- _____. (2010). 18대 총선의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6(4), 27-55.
- 이갑윤, & 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70.
- 이내영, & 안중기.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12(2), 5-36.
- 이창한. (2012). 치안관련공약과 당선경쟁력의 관계-19대 서울지역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5, 109.
- 장갑호, 김재기, & 송건섭 (2009). 의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지 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3): 111-133.
-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 장승진, 길정아 (2014).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 투표를 했는가? 한국과국제정치(KWP), 30(3), 1-28.
- 전진영. (2015).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현대정치연구, 8(1), 99-125.
- 정수현, 허석재, & 정희옥. (2017). 국회의원 공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미래정치연구, 7(1), 109-134.
- 정진웅. (2020). 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 홍보활동 평가와 과제. 입

- 법과 정책, 12(3), 89-116.
- 정회욱. (201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11(2), 125-155.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0(2), 51-74.
-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111-135.
- 차영란. (2020). 정치 PR 전략으로서의 SNS 메시지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208-223.
- 최성재. (2006). 미국 의회선거와 선거자금 -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 국제지역연구, 15(4), 69-98.
- 최준영. (2012).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11(1), 59-85.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요인분석 :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7(3), 71-99.
- _____. (2011). 현직자의 당적 변경과 재당선 : 민주화 이후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99-119.
- 황아란. (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203-222.
- 허진. (2020).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 :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 Cox, D. (1959). The Regression Analysis of Binary Sequenc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21(1), 238.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 Anthony Downs.
-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yhew, David (2008). Incumbency Advantage in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Historical Record.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3(2): 201–228.
- Muller, Stefan. (2020). Media Coverage of Campaign Promises Throughout the Electoral Cycle. *Political Communication*, 37(5), 696–718.
- Riker, W., & Ordeshook, P.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2.
- Schattschneider, E. (1935). *Politics, Pressures and the Tariff : A Study of Free Private Enterprise in Pressure Politics, as Shown in the 1929–1930 Revision of the Tariff / by E.E. Schattschneider*.
- Thomson, Robert, & Brandenburg, Heinz. (2019). Trust and Citizens' Evaluations of Promise Keeping by Governing Parties. *Political Studies*, 67(1), 249–266.
- Tremblay–Antoine, Camille, Cote, Guillaume, Dufresne, Yannick, & Birch, Lisa. (2020). What Do We Know About Campaign Pledge Evaluation Tool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17(3), 304–320.
- V. O. Key, Jr.,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Book Review). (1967). *Quaderni Di Sociologia*, 16, 97.
- Werner, Annika. (2019). What voters want from their parties: Testing the promise–keeping assumption. *Electoral Studies*, 57, 186–195.

Abstract

Effects of Policy pledge fulfillment on National Assembly election - Focus on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

Kyoung suk, Ka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legislative result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formulate and implement national policies.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he policy legislative results of lawmakers can be measured and how their policy performance affects the actual election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nomination and electio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number of policy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legislative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amo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research assumes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pledges and the higher the implementation rate, the more positive the nomination, and the election would have been. To prove this, the Korea Manifesto Practice Headquarters conducted a study based on evaluation data on the implementation of pledges that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pledges of

253 lawmak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candidate and party factors,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impact and extent of the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policy legislative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nducting and analyz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neither the number of policy pledges nor implementation rates, the number of legislative pledges or implementation rat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omination and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dditionally conducted by adjusting the analysis target and scope in various ways,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In response,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incumbent lawmakers, aides, and employees of the political party secretariat to analyze the cause of such result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parliamentary activities cannot be calculated only by the number of pledges and the rate of implementation. However,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significant in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awmaker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voters to recognize its importance.

In addition,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continue to calculate the policy legislative performance achieved by lawmakers i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realizing policies and establish a new research model to analyze whether i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lection results.

keywords: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 legislative results, policy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legislative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nomination and elec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Student number: 2020–20829